

#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(요약)

##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,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

### 핵심과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

- (총괄기능 강화)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 제고, 현장중심 민원해결 강화
- (집단민원 조정) 대규모 집단민원 적극 조정·합의,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활성화
- (촘촘한 권익보호)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, 국방·경찰음부즈만 강화

### 핵심과제 ② 쉽고 편리한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- (원스톱 행정심판)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,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
- (독립성·전문성 강화) 행정심판위원 신분보장 강화, 위촉분야 확대
- (신속·편리한 서비스) 'EASY 행정심판' 기능 제공, 메타버스 체험·홍보관 개설

### 핵심과제 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

- (국민제안 정책화) '국민제안' 우수제안 발굴, 최우선 정책반영 및 관리·홍보
- (빅데이터 분석) '국민신문고' AI신기술 도입, 국민안전 민원예보·제도개선 연계
- (제도개선·적극행정) 제도개선을 부패·고충 예방, 적극행정 국민신청 기관 확대

### 핵심과제 ④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

- (불합리 관행 개선)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, 방만 관사운영·불공정 국가자격시험 개선
- (공공부문 청렴 제고) 반부패규범 운영 내실화,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실시
- (청렴문화 확산) 맞춤형·법정청렴교육 강화,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전파

### 핵심과제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·보상제도 구축

- (신고 활성화) 부패·공익신고 변호사 대리범위 확대, 이슈 현안 집중신고기간 운영
- (공공재정 누수 근절) 청렴포털 활용 부정청구 관리, 빈발분야 기획 실태조사
- (보호·보상 제도개선) 5개법 신고자 보호·보상 규정 통합, 신고자 보상금 상향 등

### 공통과제 ①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

- (반부패 규제 합리화)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 정비, 온라인 대리신고 확대
- (정부 규제혁신 지원) 국민제안·민원빅데이터 분석, 현장의 규제성 민원 해소
- (적극행정신청·소극행정신고) 규제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

### 공통과제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(2개중 1개, 50%)

- (행정심판통합)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,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

---

#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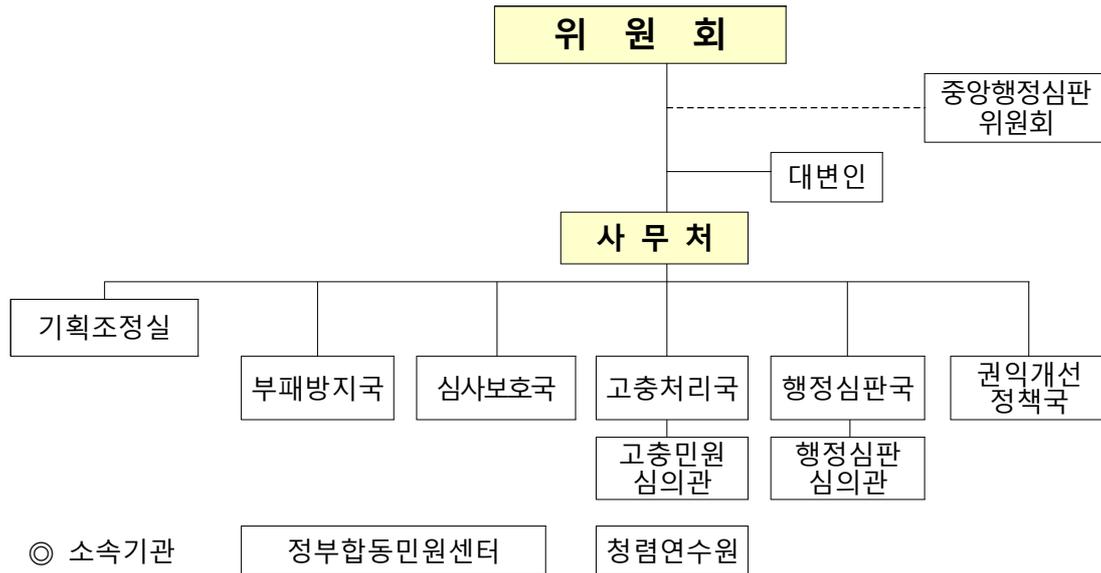
---

2022. 8. 23.

# I. 일반 현황

## 1 기구 및 조직 현황

- (위원회) 15인(위원장, 부위원장 3, 상임위원 3, 비상임위원 8)
- (사무처)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



## 2 인원 현황

(22. 6. 30. 기준)

구 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
		합계	정 원	568	4	17	14	35	42	209
	현 원	552	4	17	15	33	43	208	223	9
본부	정 원	488	4	15	13	29	40	184	192	11
	현 원	472	4	15	14	27	38	181	185	8
소속기관	정 원	80	0	2	1	6	2	25	43	1
	현 원	79	0	2	1	6	5	27	37	1

## 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1년 예산(A)	2022년 예산(B)	증감 (B-A)	(B-A)/A
계	90,835	93,288	2,453	2.7
인건비	47,833	48,240	407	0.9
기본경비	7,437	7,908	471	6.3
주요사업비	35,565	37,140	1,575	4.4
반부패청렴정책강화	10,580	11,473	893	8.4
국민고충해소	1,625	1,331	△294	△18.1
행정심판	1,144	1,076	△68	△5.9
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	10,682	11,266	584	5.5

## II. 핵심 추진과제

비전

**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,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**

목표

**민생고충 최우선 해결,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**

핵심  
추진  
과제

**국민에게 힘이되는  
적극적 권익구제**

**국민과 함께 하는  
정책·제도개선**

**국민 눈높이에 맞는  
공정과 상식 확립**

범정부 고충민원  
총괄기능 강화

국민제안의  
적극적인 정책화

공직사회의  
불합리한 관행 개선

집단민원 조정으로  
사회갈등 해소

빅데이터 분석  
활용 정책지원

공공부문  
청렴수준 제고

쉽고 편리한  
원스톱 행정심판

제도개선 및  
적극행정 활성화

신뢰받는 신고자  
보호·보상 제도



공  
통  
과  
제

### 1.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

- △ 반부패 법·정책의 규제 합리화
- △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접점의 규제 개선
- △ 규제성 민원·부당한 행정 적극 해소

### 2.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

- △ 각 기관에 산재된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과 중앙행심위 통합 (국정과제)

#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

◇ 정부 내 **중립적·최종적인 권익구제 전문기관**으로서 영세기업, 소상공인, 저소득층 등 **취약계층의 고충**을 **집중 해결**하고 **민생안정 지원**

## □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

- (실효성 제고) 민원서비스평가 청렴도평가를 통해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을 제고하고,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제3자 입장에서 적극 해결\*
  - \*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(시정권고·조정·합의 등) : 최근 3년 20.0% → '22년 21.3%
- (민생고충 해결) 관계기관 협업으로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·복지·금융민원을 집중 해결하고, 대통령실 서신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\*
  - \*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, 권익위 직접 조사→처리결과 보고

주 거	복 지	세 무·금 용
 임차권 승계, 강제 퇴거, 시설 개보수 등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고충	 긴급복지지원, 기초생활수급, 장애등급 결정 등 저소득층 고충	 단순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과다 세금부과, 보험계약 등 피해

- (현장중심 민원해결) 소외지역·취약계층\* 및 영세·중소기업\*\*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고와 경영상 애로사항 등 적극 상담·해결
  - \* '달리는 국민신문고'(21년 91회→22년 100회) \*\* '기동해결 특별컨설팅'(연12회)

## □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

- (집단민원 적극 해소) 대규모 집단민원,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사안 등을 조정·합의를 통해 적극 해결('22.6월 기준, 집단민원 54건 조정·합의)
- (조정 실효성 강화) 초기 현장방문 강화, 민원인-이해관계자-전문가가 참여하는 '집단민원 조정협의회' 운영 활성화로 조정 성공률 제고
  - ※ (사례) 울진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요구(7,606명), 조치원비행장 군사보호구역 축소 요구(1,770명)

## □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보호

- (지역민원 해결역량 강화) 권익위를 보완하여 지역 현안민원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\* 확대 및 컨설팅·우수사례 공유
  - \* 전국 67개 지자체 설치·운영('22.6월), '50만 이상 지자체 설치 의무화'(개정안 국회 계류)
- (전문음부즈만 활성화) 전문조사관이 군 복무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방·경찰음부즈만 강화
  - ※ 사건 초기부터 전문조사관을 지정·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확산 차단

## ② 쉽고 편리한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- ◇ 다양한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·처리시스템을 통합하여 **국민편의를 제고**하고, 행정심판의 **공정성·신속성 제고**

### □ 국민중심 원스톱(ONE-STOP) 행정심판 구현 국정과제 13

- (행정심판기관 통합)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 통합 추진
  - 각 기관별 의사결정구조, 사건처리·인력운용 현황, 통합의 장·단점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대상 선별 및 법개정안 마련(~'23.6월)
  - ※ 통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('22.7~12월), 공청회('23.1~4월) 추진
- (온라인 시스템 통합)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·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청구·진행상황 확인·사건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(~'25.12월)
  - ※ 행정심판 기관 중 60.2%가 '행정심판 허브시스템' 이용중
  - ※ 통합에 따른 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(BPR/ISP) 수립('23.1~6월)

### □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국정과제 13

- (독립성 보장) 행정심판 심리·재결 과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
  - ※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사유 한정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 금지
- (전문성 강화)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
  - ※ (현행) 법률, 의료 분야 → (향후) 회계, 건설, 의약품 분야 등으로 확대

### □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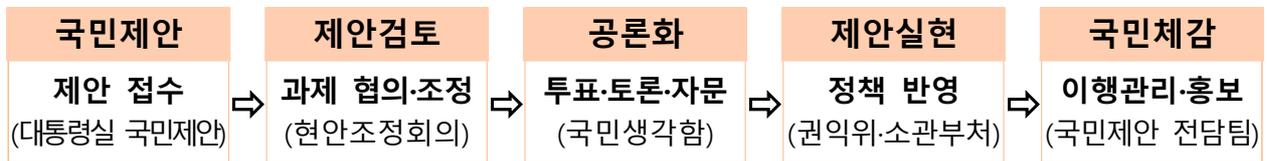
- (EASY 행정심판)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'청구서 자동완성\*' 기능 도입, '청구인 맞춤형 심판사례' 제공 등('23.1월)
  - \* 처분 유형·일자, 행정심판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선택하면 청구서 완성
- (메타버스 체험·홍보)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'메타버스 체험·홍보관\*' 개설('22.7월)
  - \* 상담관(1:1 화상상담), 체험관(심판정, 모의행정심판), 교육관, 이벤트관(OX퀴즈)으로 구성
  - ※ 향후 체험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(~'24년)

### 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

◇ 제안, 민원 등 **국민의 목소리를 반영**하여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**제도개선 추진**, **민원빅데이터**에 기반한 **과학적 정책개선 지원**

#### □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지원

- (제안접수·정책화) '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'에 접수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, 기관협업·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·숙성  
※ 대통령실과 협업하여 '이달의 우수제안 선정 제안분석(일일주간·월간, 월간 브리핑 등 지원(22.8월~))
- (이행관리·홍보) '국민제안 전담팀'을 구성하여 발굴된 정책과제의 최우선 정책반영 추진 및 이행관리·대국민 홍보 실시('22.7월~)



#### □ 공공·민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

- (AI 국민신문고) 연간 2천만건 민원이 집중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의 연결기관을 확대\*하고, AI 신기술·디지털 원패스 기능 도입  
\* '21년 6월 현재 1,092개 기관 연결 → 사립대학교, 공공기관 등 2,000개 이상 확대 추진
- (빅데이터 분석) 국민관심 현안이슈에 대해 민원빅데이터와 융·복합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민원예보를 발령\*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  
\* '지능형 빅데이터 분석·예측 시스템' 구축(~'24년)으로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 강화

#### □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·적극행정

- (제도개선)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주요분야(경제활성화, 청년지원, 사회안전망, 생활속 불공정 등) 관련 제도개선으로 부패·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 
※ (예시)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국민불편 해소,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,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, 노인학대 방지 감독체계 및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
- (적극행정) 중앙부처·지자체 대상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\*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 공공부문에 국민중심의 행정 확산  
\* 국민이 법령 불명확 등으로 거부된 제안·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

#### ④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

- ◇ **국가 청렴도\* 20위권 도약**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획기적 향상  
\* 국제투명성기구(TI)가 매년 국가별 공공·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대표적 국제반부패 지표, 한국은 '21년 180개 국 중 32위(62점)
- ◇ **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역량의 강화**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

#### □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

- (채용비리 근절)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, 행정기관 비공무원(공무직 등)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(~23.1월) 등 공정채용 기반 강화·확산 **국정과제 91**  
※ 공직유관단체('21년 채용·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,212개) 채용실태 전수조사(~10월)
- (부패유발 법규 개선) 공공기관 사규(~12월)·지자체 자치법규(22.7월~23년)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불공정 규제로 인한 부패유발 요인 집중 정비
- (불공정 관행 제도개선)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,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 등 불공정 제도 적극 개선 **국정과제 13, 91**

#### □ 공공부문 청렴수준의 획기적 제고

- (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) 청탁금지법('16년 시행), 이해충돌방지법('22년 시행) 등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을 내실화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안착  
※ 공직자 교육, 워크숍 등 소통 강화(연중),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이행 점검('22.하반기)
- (종합청렴도 평가) 각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인식·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 평가('22~)  
※ 총 573개 기관(중앙부처 46개, 지자체 243개, 공공기관 199개 등)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 
청렴도 저조기관(4~5등급)은 청렴컨설팅으로 맞춤형 개선안(조직문화,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) 제공

#### □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

- (청렴교육 강화) 맞춤형 청렴교육\* 및 법정 청렴교육(연 2시간) 이행관리\*\* 강화  
\* 고위공직자, 공기업(청렴윤리경영), 공정채용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·제공  
\*\* 기관별 의무교육(연 2시간) 이수실적을 점검, 저조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('22.하)
- (청렴윤리경영 지원) 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'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(K-CP) 개발, 컨설팅·교육을 통해 자율실천 지원

##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·보상제도 구축

◇ **부패·공익 신고 등 활성화** 및 **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개선**으로  
공정사회를 조성하고 건전재정을 지원

※ 부패·공익신고 등으로 10년간(12~21년) 총 2조 6,539억원의 재정수입 회복증대 발생

### □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제도강화

- (비실명 대리신고 확대) 부패·공익신고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의 대리범위를 신고 이후의 조사·수사·재판 등으로 확대
- (집중신고기간 운영)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·공익침해·부정수급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시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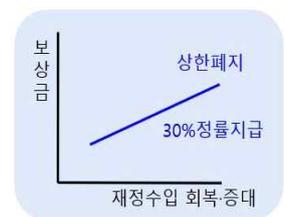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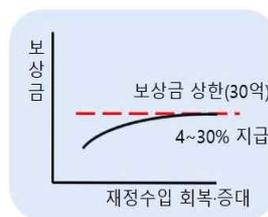
### □ 체계적 신고 관리로 공공재정 누수 근절

- (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리강화) ‘청렴포털’로 부정청구 신고·관리, 기관별·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 및 환수금액 등 대국민 공개  
※ 중앙·지자체 등 308개 기관의 환수제재 현황 분기별 점검 및 누락 시 환수 등 적극 조치
- (취약분야 실태점검) 부정수급 신고현황 분석결과 파악되는 부정청구 취약·빈발분야(고용·노동, R&D·산업 등)는 기획 실태조사로 집중 점검

### □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개선

- (제도 일원화) 공공재정환수법 등 5개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·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국민혼란 예방(~23.6월)  
※ 보상금 지급요건, 불이익조치 일시정지·보호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 여부 등 통일

- (신고자 보상금 상향) 환수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지급률(4~30%)을 30%로 통일, 상한액(30억) 조정·폐지



- (신분노출 적극 방지) 신고자 신분을 공개·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·지시한 자도 처벌(개정안 국회 계류)
- (보호조치 실효성 제고) 보호조치 의무 위반자 명단공표, 신고자 정보 관련 기사 삭제 등 신고자 보호제도 보강(개정안 국회 계류)

### Ⅲ. 공통과제 이행계획

#### ①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

##### □ 개요

- 반부패 법·정책의 규제 합리화, 고충처리·행정심판·제도개선 등 위원회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필요

##### 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##### ① 반부패 법·정책의 규제 합리화 추진

- (불합리·과도한 규제 개선) 청탁금지법,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범의 운영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·방식 등 발굴·정비  
※ 최근 3년간 빈발질의,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피규제자 관점의 수요 분석을 통해 소관 법상 정비 필요 규정 발굴(1차 : ~'22.하반기)
- (국민불편 요소 제거)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온라인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, 보호·보상 통합기준 마련 등으로 국민불편 요소 적극 해소

##### ② 국민 접점에서 정부 내 규제혁신 전방위 지원

- (중점분야 집중개선) 국민제안·민원빅데이터 등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여 국민 생활 접점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집중 발굴  
\* ('21년) 부동산 중개보수서비스 개선, 친환경차 지원제도 개선, 아동급식카드 지원 강화
- (규제·부당행정 해소) 현장중심 고충처리,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성 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소

##### ③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문화 조성 및 확산

- (적극행정 활성화) 기관에서 거부된 제안·민원의 재처리를 요청하는 '적극행정국민신청제'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선과제\*를 면밀히 검토  
\* 중점 추진분야(청년세대 관련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애로, 코로나19 민생회복, 생활속 불편)
- (소극행정 예방) 각 기관의 소극행정 처리결과에 대한 재신고를 적극 검토하고 조치를 권고하여 규제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  
※ 소극행정 빈발분야 사례 조사·분석(~'22.12월), 이행점검(1차: ~'22.12월)

##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

### □ 정비 대상 위원회 : 전체 2개 중 1개\*(50%)

- (중앙행정심판위원회) 「행정심판법」에 근거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
  - \*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반행정심판기관(헌법기관·지자체 행정심판기관 등)을 제외하고, 각 기관에 흩어진 **총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대상 통합**을 검토·추진 중(국정과제)
- (보상심의위원회)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부패·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
  - ※ 단순 자문·협의가 아닌 관련 **법령에 따른 의결권**을 갖고 **권익위 핵심기능(신고자 보호·보상)**을 수행하는 위원회로, **존치 필요성이 높음**

### □ 정비 방안 : 행정심판위원회 통합(국정과제)

- (필요성) 소청심사위, 중앙노동위, 조세심판원 등 66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 발생
  - ※ 대부분 처분청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독립성·객관성 훼손 우려도 존재
- (주요내용)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조직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 위원회에서 운영
  -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특성, 의사결정구조, 운영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 검토·추진
  - 전체 행정심판기관의 심판청구·사건처리 온라인 시스템 통합
    - ※ 현재 123개 기관(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포함) 중 74개 기관(60.2%)이 온라인 허브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,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우선 연결(link) 후 단계적 통합
- (기대효과) 기관 및 온라인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조직·인력·예산 효율성 극대화 및 ONE-STOP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제고

### □ 추진 계획

- '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방안 연구용역'(22.7~12월)
- 「행정심판법」 개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, 국회 제출 등(~'23.12월)
-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BPR/ISP('23년) 및 통합 완료('24~'25년)

위원회명	소속	설치근거	위원장 (임기)	위원 수 (공무원 제외)	전임 직원 수	'19~'21 회의실적 (본회의만, 서면제외.)	'22 예산 (단위 : 백만원)
중앙행정심판위원회	권익위	법률	김기표 (권익위 부위원장, 20.1~23.1)	66	65	341	1,076 (간비정보화 제외)
보상심의위원회	권익위	법률	박계옥 (권익위 상임위원, 21.9~22.12)	5	10	31	32
계	대통령 : 0개 총리 : 0개 부처 : 2개	법 : 2개 령 : 0개 규칙 : 0개		평균 35.5	평균 37.5	평균 186	평균 554

**[참고] 특별행정심판기관 현황(총 66개)**

- ▲ 조세심판원
- ▲ 특허심판원
- ▲ 중앙해양안전심판원
- ▲ 중앙토지수용위원회
- ▲ 중앙노동위원회
- ▲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
- ▲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
- ▲ 국세심사위원회
- ▲ 관세심사위원회
- ▲ 장기요양심판위원회
- ▲ 고용보험심사위원회
- ▲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
- ▲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
- ▲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
- ▲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
- ▲ 난민위원회
- ▲ (법무부) 변호사징계위원회
- ▲ 광업조정위원회
- ▲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
- ▲ 품종보호심판위원회
- ▲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
- ▲ 소청심사위원회
- ▲ 교원소청심사위원회
- ▲ 시·도 소청심사위원회(17개)
- ▲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(17개)
- ▲ 국회·법원·헌재·중앙선관위 소속 소청심사위원회(4개)
- ▲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
- ▲ 각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(3개)
- ▲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